

유형별 농가경제 실태와 이행 경로 분석*

유찬희^{a**} · 김윤진^b · 김창호^c

^a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연구위원 (전남 나주시 빗가람로 601)

^b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전문연구원 (전남 나주시 빗가람로 601)

^c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전문연구원 (전남 나주시 빗가람로 601)

Farm Economy Status and Transitional Trajectories by Farm Types

Chan-Hee Rhew^a · Yun-Jin Kim^b · Chang-Ho Kim^c

^aSenior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Agricultural & Rural Development Research, KREI, 601 Bitgaram-ro, Naju-si, Jeonnam, Korea

^bResearcher, Center for Agricultural Policy Evaluation, KREI, 601 Bitgaram-ro, Naju-si, Jeonnam, Korea

^cResearcher, Department of Agricultural & Rural Development Research, KREI, 601 Bitgaram-ro, Naju-si, Jeonnam,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at shedding light on two questions: 1) how livelihood strategies hired by heterogeneous farm households differ and in what aspect, and 2) would the strategy change over time or remain identical across farm types? Using 2013-2017 Farm Economy Survey panel data, we divide the sample farms into 4 sub-groups based on income level and source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less of farm types, strong path dependency has been observed. That is, lots of farms are likely (enforced) to maintain the livelihood strategies, accounting for why many farms fail to response to market and/or policy signals. Second, along with compounding risks, farms are more vulnerable to specific sorts risks. Third, based on the findings, we made policy suggestions.

Key words: farm household income, farm types, transitional trajectories, livelihood strategies

1. 서론

한국 농가는 오랫동안 농가소득의 심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1995년 이후 실질 농업소득이 농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문제가 심화되면서 농업 및 농가소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이정환 등,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평균 농가소득이 2018년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었고 2029년까지 연평균 1.7% 증가하여 5,035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국승용 등, 2020)도 제기되지만, 최근 까지 농가소득 흐름을 보았을 때 농가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소득 원천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 구조의 ‘건전성’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공익직불제 개편과 농민수당 논의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현상의 이면에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든 소득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농가소득 문제가 중요한 만큼 이 주제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매우 방대하다. 농가소득을 다룬 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 갈래는 농가소득 자체에 주목한 연구로 다시 몇 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농가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접근이 이루어졌다. 강혜정(2013, 2015), 박준기, 황의식, & 문한필(2005)은 표본 농가 중위소득이나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경제

주요어: 농가소득, 농가유형, 이행 경로, 살림살이 전략

* 이 논문은 한국농업경제학회 2019 연례학술대회(2019.7.8-9)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교신저자(유찬희) 전화: 061-820-2022; e-mail: chrhew@krei.re.kr

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식별한 뒤 이 집단이 지닌 특성을 도출하였다. 2) 농가 간 소득 불평등 또는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박종섭, & 이병기, 2000; 김성용, 2004; 안동환, 2004; 정진화, & 조현정, 2012; 오내원 등, 2013; 김규섭, & 이성근, 2014a, 2014b; 허등용, 2018; 이두영 등, 2019). 이 갈래 연구는 지니계수, EGR 지수, DER 지수 등 양극화 정도를 계측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농가소득 원천이나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등을 비교하여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3) 농가 경제 전반이 장기적으로 변화해 온 양상을 진단하거나(박재홍, 2016), 가구 생애주기(임소영, 2017) 또는 보다 간략하게 경영주 연령별로 농가소득 변화 양상을 비교(정진화, & 조현정, 2012)하는 접근이 이루어졌다. 4) 재무 지표를 활용하여 농가경제 건전성을 진단하려는 시도도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졌다(유찬희, 박준기, 김종인, & 박지연, 2016; 정대희, 임준혁, & 한두봉, 2018). 5) 다수 연구가 농업소득이 만성적으로 불충분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농외소득 증대(정책)에 주목하였다. 오내원, & 김은순(2001)은 전·겸업 농가소득을 비교하여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해당 개념이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시 추진 중이던 농외소득 증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권오상, & 강혜정(2006), 이상원, 추성민, 안동환, 김혁주, & 김관수(2018)는 특정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농업 보조금을 비롯한 이전소득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김태이, 임정빈, & 안동환(2012), 정선화·강혜정(2015), 유찬희, 박준기, 김종인, & 박지연(2016) 등이 있다. 특히 정선화·강혜정(2015)은 원천별 소득이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까지 분석하였다.

두 번째 갈래 연구는 농가소득과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지출(소비) 행태를 분석하였다(김성용, & 이계임, 2002, 2003; 정선화, & 강혜정, 2015). 농가가 일반 근로자 가구와 달리 “생산경제(경영)와 소비경제(가계)의 양면성을 가진다는 측면”(김정호, 2012)이나 “농업 생산 활동, 소비 활동, 노동자 행동이 결합된 경제 주체”(김병택, 2002)이므로 농가구 지출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갈래 연구는 농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농가가 점차

복잡다기하게 분화되고 작동 원리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평균 농가 개념으로 농업을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김미복, & 박성재, 2014)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연구는 주로 경영주 연령과 경지 규모 또는 두 가지 변수 조합하거나(김미복, 오내원, & 황의식, 2016; 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 한보현, 2017; 유찬희, 서홍석, & 김태후, 2019), 『농가경제조사』상 영농 형태(윤지원, & 권오상, 2015) 또는 정부의 ‘맞춤형 농정’ 기준(한석호, 김수석, 채광석, 유찬희, 남경수, & 정호연, 2016)에 따라 농가 유형을 분류한 뒤 분석하였다.

농가소득을 다룬 국내 연구는 대부분 위 세 갈래 중 하나 또는 둘을 결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앞선 연구들이 농가소득 문제를 진단·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농가소득과 지출을 함께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최종 목적이 가구원 삶을 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연구는 소득 또는 지출 중 한 측면만을 깊게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다수 연구에서 사용한 농가 유형¹⁾이 과연 직절(直切)한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경영주 연령과 영농 규모라는 비교적 단순한 특성만으로는 다양해지고 있는 농가 성격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경영주 연령은 ‘가구주 연령이 가구 생애주기를 반영’한다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담고 있으나 개인 특성으로 가구 특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영농 규모 역시 다양한 품목·축종의 특성과 여기서 파생되는 결과인 농가 경제를 측정하는 잣대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²⁾ 뿐만 아니라 경영주 연령과 경지 규모 모두 영농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사전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영농 활동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기후, 작황, 판매 가격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임소영(2017) 등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 농가경제가 앞으로 어떠한 경로를 따라 움직일 것인가라는 동태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농가를 유형화하고 농가경제 및 지출 특성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 논문의 목적은 실제 얻은 소득(realized income) 수준과 원천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농가의 이행 경로를

1)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다룬 기준 외에 『농가경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전문농·일반농·부업농·자급농이나 ‘맞춤형 농장’을 추진하면서 도입하였던 전문농·일반농(예비전문농, 6차농·일반농)·고령농(고령농, 은퇴농)·창업농·취미농(경영체유형화특별추진단, 2016) 등의 기준까지 아우른다.
2)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최양부, 박성재, & 오내원(1983)이 고안했던 ‘표준 영농 규모’나 김수석, 김태곤, & 강혜정(2006)이 제시한 ‘환산 영농 규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두 지표 모두 전국 평균 지가 등을 이용하여 규모를 변환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영 형태, 소득·지출 관계,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이 논문은 주로 경영주 연령과 (표준) 영농 규모를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려는 기존 시도에 의문을 갖는 데서 출발하였다. 먼저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료를 입수하기 쉽다는 점이고, 동시에 경영주 연령이 해당 가구 생애 주기를 일정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농가=가족농’이라는 관계가 대체로 성립하던 시기까지는 적절할 기준일 수 있다. 정기환(1993)이 지적하였듯이 농가 가구원 규모는 농가 경영주 생애주기에 영향을 받고, 가구원 수와 농가 경영 규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가 가구원 구성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가족적 농업 경영’이 더 이상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오늘날(김정호, 2012) 이러한 등식이 여전히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다.³⁾

마찬가지로 영농 규모는 품목이나 축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농가 구성원 중 농업에 주로 종사하지 않는 이’가 참여하는 소득 활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Mishra, El-Osta, Morehart, Johnson, & Hopkins, 2002). 농가가 겸업 형태로 소득을 창출하는 행태를 탈농의 전조(前兆)로 받아들이거나(김정호, 2012), 생산 요소·주체·품목 등을 재조정하여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서종혁, & 김은경, 2007) 이 과정에서 경영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소농 계층의 소득을 유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재촌탈농을 유도하는 수단(서종혁 등, 1991)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자가 영농 이외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 비율이 2015년 현재 83.7%에 이른다는 실태(김정섭, 오내원, & 김경인, 20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가 소득 창출 활동 다양화는 한국에서도 더 이상 낮설거나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1990년대 유럽에서는 파트타임 영농(part-time farming), 다각화(diversification), 다면적 활동(pluriactivity)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농가 작동 원리와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결과 개념 자체가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면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안

에서도 다양한 양태가 나타난다는 실증 사례도 여러 나라에서 다수 발견되었다(Fuller, 1990; Bowler, Clark, Crockett, Ilbery, & Shaw, 1996; Kinsella, Wilson, de Jong, & Renting, 2000; Ploeg, & Ye, 2010; Gautam, & Anderson, 2016; Weltin, Zasada, Farnke, Piorr, Raggi, & Viaggi, 2017).

현실에서 다양한 농의소득 창출 활동을 꾀하는 이유는 위험 분산, “영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수용” (Ahearn, & El-Osta, 1993), 불안전 고용 해소(이영기, 2006) 등 다양하다. 과거에 대규모 농가로 발전하는 전략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를 정의하려던 연구 동향이 점차 미시 수준에서 소규모 농가 특성을 분석하고 가족농을 지원하는 정책 설계의 기초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향(Cervantes-Godoy, 2015)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경영주 연령과 영농 규모를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는 방식은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 한국 농가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거나 경영주 연령이나 영농 규모 등 ‘사전적’ 기준 대신 실현된 결과인 ‘소득’ 수준과 원천을 이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였다.⁴⁾ 최양부(1978)가 주장하였듯이 “개별 농가들의 현재의 소득 수준과 소득 구성을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소득 수준 그 자체가 개별 농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외적 내적 변수들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왔는가를 직접적으로 표시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구성은 농가소득 증대 방향에 관한 개별 농가들의 의사결정과 노력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개별 농가는 전체 사회 체계의 구조적 변화 압력에 따라 다양한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존재” (조승연, 2000)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그 결과물인 소득을 기준으로 농가경제 행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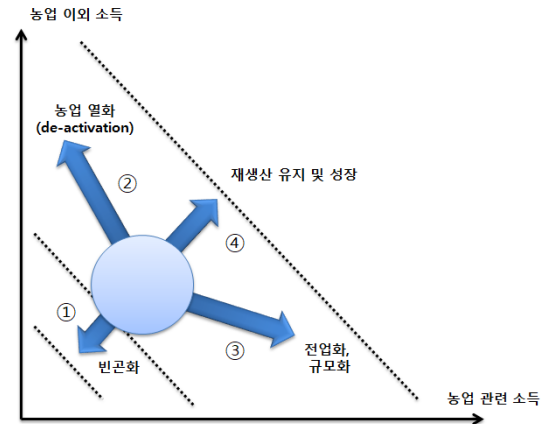
또한 소득 자체를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면 기존 접근보다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영농 규모와 품목·축종 등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더라도 특정 유형 농가가 특정 연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영농 활동을 비롯한 각종 소득 창출 행위의 목적이 소비, 나아가 소비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결과물인 소득 자체를 이용하면 소득·소비·후생 극대화로 이어지는 실제 가구 작동 원리를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정선화,

3) 정기환(1993)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가족농 겸 자작농이 자작농(전업적, 겸업적), 임차농(전업적, 겸업적), 기업농으로 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4) 앞서 지적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기준’이 지니는 장점도 분명하다. 특히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경영주 연령과 영농 규모라는 기준은 보다 객관적이고,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에 비해 행정(거래)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강혜정(2015)이 소득원별 한계소비 성향을 분석한 이유나 “농외 노동 소득은 경지 규모나 농업 소득보다는 가계지출 규모나 가구원 수와 더 큰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김정섭, 오내원, & 김경인(2016) 등의 발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득 창출과 지출 규모 모두 급진 단위로 계속된다는 점에서 기존 유형 분류 기준보다 일관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농가 유형을 분류하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변화인 농가 이행 경로(transitional trajectories)를 규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 농업 또는 농가소득이 0보다 작은 농가를 관찰할 수 있다. 특정 연도에 농업 또는 농가소득이 손실에 이르더라도 해당 농가가 대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입금을 활용하여)부채를 늘리면서 대응할 수도 있고, 농외소득 활동을 늘릴 수도 있으며,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탈농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전 기준 중 영농 규모나 품목·축종 변화 역시 이러한 대응 전략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가구(farm households)의 소득 원천 및 규모와 지출 수준에 따라 이러한 의사결정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면 유형별 농가의 특성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양부(1978)는 개별 농가는 농가소득이 일정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는 농업·농외소득을 모두 늘릴 수 있으나, 일종의 소득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농업(농외)소득이 많은 농가는 농업(농외)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영 방식을 군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실증 분석한 논의가 Ploeg, & Ye(2010)이다. Ploeg, & Ye(2010)는 중국 허베이 성 마을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실시한 분석 결과와 이론 논의를 토대로 다중 취업(multiple job holding)을 설명하였다. 이 개념과 실증 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마을 농가 중 상당수가 1) 영농 규모를 계속 늘리면서 영농 활동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화·규모화(enlargement), 2) 소득원천으로서 영농 활동을 줄이면서 다른 경제 활동 의존도를 높이는 농업 열화(deactivation), 3) 농업과 비농업 소득이 모두 줄어드는 빈곤화(pauperization), 4) 농업과 농외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경로를 따른다고 주장하였



<그림 1> 농가의 잠재적 이행 경로

자료: Ploeg, & Ye(2010) <그림 5>를 수정.

다<그림 1>. 한국에서 이루어진 농가 유형 정의의 목적 역시 특정 농가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태적인 특성에 더해 특정 유형 농가가 어떠한 경로로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한다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5년 동안 계속 응답한 농가 1,745호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하면 조사 기간 동안 동일한 농가를 표본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3.2. 분석 방법

연구 목적에 맞추어 농가소득 규모와 원천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였다<표 1>.6)7) 농가소득 원천은 기본적으로 김정섭,

5) Ploeg, & Ye(2010)는 이 경로를 소농 경제(peasant economy)라고 이름 지었다. 해당 연구의 목적과 중국 허베이 성 조사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 명칭이 적합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경로 ④를 소농 경제라고 명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로 ④를 따를 수 있다면 농가경제 건전성이나 안정성, 가족 노동력 고용 등의 측면에서 재생산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림 1>의 경로 묘사와 명칭을 바꾸었다.

6) 소득 수준과 구성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예시로 가장 직관적인 50%를 적용하였다.

7) 엄밀히 말하면 농외소득을 전부 ‘농업 이외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현실을 적절하게 투영하지 못한다. 농외소득 중 겸업소득(예: 농산물 가공업이나 직판장 운영)과 사업외소득(예: 수탁 작업) 중 일부는 영농 활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가경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각 소득원천별로 어느 정도 비중이 영농 활동 기반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하였다.

오내원, & 김경인(2016)에서 제시한 ‘농업소득’과 ‘농외 노동 소득’ 개념을 변용하였다. 즉 ‘농업 관련 소득’(=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 이전소득 중 농업보조금(공적보조금 내 세부 항목))과 ‘농업 이외 소득’(=농외소득 + 이전소득 중 농업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 비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전소득 중 농업보조금과 그 외를 분리한 이유는 농업보조금 역시 영농 활동을 전제로 얻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류 기준을 적용한 결

과 연도별·유형별 농가는 <표 2>와 같이 분포하였다.

3.3. 유형별 주요 특징

농가 유형별 소득 및 지출 규모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첫째, 2013~2017년 동안 공통적으로 농가 자산 규모는 증가하였고, 특히 농업용 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주로 토지

<표 1> 소득 수준과 원천별 비중을 이용한 농가 유형화 기준

구분	소득 수준	소득 구성
유형 1	개별 농가소득이 표본 농가 중위 농가소득 이상	농가소득 중 '농업 관련 소득' 비중 50% 이상
유형 2	개별 농가소득이 표본 농가 중위 농가소득 미만	농가소득 중 '농업 관련 소득' 비중 50% 이상
유형 3	개별 농가소득이 표본 농가 중위 농가소득 이상	농가소득 중 '농업 관련 소득' 비중 50% 미만
유형 4	개별 농가소득이 표본 농가 중위 농가소득 미만	농가소득 중 '농업 관련 소득' 비중 50% 미만

자료: 저자 작성.

<표 2> 연도별·유형별 농가 빈도

(단위 : 호,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형 1	383 (28.1)	359 (20.6)	379 (21.7)	361 (20.7)	356 (20.4)
유형 2	533 (39.1)	559 (32.1)	550 (31.5)	542 (31.1)	544 (31.2)
유형 3	310 (22.8)	271 (15.5)	226 (12.9)	207 (11.9)	204 (11.7)
유형 4	519 (38.1)	556 (31.9)	590 (33.8)	635 (36.4)	641 (36.7)
소계	1,745 (100.0)	1,745 (100.0)	1,745 (100.0)	1,745 (100.0)	1,745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표 3> 농가 유형별 경제 실태 기초 통계량

(단위 : 만 원)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자산 (연중)	농업용	26,742.6	34,716.8	17,468.3	20,302.3	19,090.7	24,931.5	12,189.2	12,958.0
	가계용	6,640.2	7,913.0	8,577.4	9,841.8	5,360.6	7,103.6	6,360.5	6,447.0
	겸업용	920.1	537.8	3,245.2	3,272.4	98.1	217.5	712.7	658.1
부채 (연중)	농업용	4,577.5	4,427.3	1,042.6	1,241.9	1,584.3	1,861.8	720.3	785.9
	가계용	844.7	1,168.1	803.1	1,312.8	689.3	737.3	520.9	550.3
	겸업용	127.3	142.8	471.3	483.8	0.5	46.6	32.4	63.4
원천별 소득	농업	4,793.9	5,844.9	625.8	550.6	234.0	154.0	112.1	90.5
	겸업	243.9	224.6	784.6	946.1	39.7	80.5	144.4	104.5
	사업외	426.8	538.4	2,372.7	2,417.7	175.9	127.0	433.4	351.7
	이전	666.9	1,029.8	821.4	1,056.6	394.2	600.4	537.0	778.3
	비경상	274.4	280.8	448.0	491.6	135.4	132.8	203.6	250.9
	농업 관련	5,164.5	6,365.1	760.4	674.0	394.7	389.0	199.8	177.4
	농업 이외	1,241.3	1,553.5	4,292.0	4,788.6	584.5	705.7	1,230.7	1,398.5
용도별 지출	소비	2,890.3	3,245.2	3,130.2	3,165.6	1,733.4	1,998.9	1,670.9	1,622.5
	비소비	803.3	824.5	818.4	900.0	369.9	397.0	342.5	312.3

주: 자산과 부채는 연도 초와 연도 말 조사치를 평균한 연중 값으로 표기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표 4〉 농가 유형별 경영 형태 및 인구학적 특성 기초 통계량

(단위 : ha, 호, 세, 명, (%))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표준 영농 규모	4.0	4.3	1.7	1.9	2.1	2.1	1.4	1.3	
전· 겸업	전업	237 (61.9)	214 (60.1)	95 (17.8)	87 (16.0)	238 (76.8)	166 (81.4)	313 (60.3)	382 (59.6)
	1종 겸업	145 (37.9)	140 (39.3)	112 (21.0)	131 (24.1)	68 (21.9)	35 (17.2)	104 (20.0)	131 (20.4)
	2종 겸업	1 (0.3)	2 (0.6)	326 (61.2)	326 (59.9)	4 (1.3)	3 (1.5)	102 (19.7)	128 (20.0)
농가 형태	전문농	345 (90.1)	319 (89.6)	95 (17.8)	115 (21.1)	140 (45.2)	110 (53.9)	77 (14.8)	75 (11.7)
	일반농	34 (8.9)	33 (9.3)	75 (14.1)	72 (13.2)	163 (52.6)	86 (42.2)	272 (52.4)	353 (55.1)
	부업농	2 (0.5)	2 (0.6)	313 (58.7)	305 (56.1)	7 (2.3)	5 (2.5)	110 (21.2)	123 (19.2)
	자급농	2 (0.5)	2 (0.6)	50 (9.4)	52 (9.6)	0 (0.0)	3 (1.5)	60 (11.6)	90 (14.0)
영농 형태	논벼	54 (14.1)	60 (16.9)	52 (9.8)	54 (9.9)	92 (29.7)	54 (26.5)	135 (26.0)	137 (21.4)
	과수	91 (23.8)	62 (17.4)	29 (5.4)	45 (8.3)	42 (13.5)	36 (17.6)	28 (5.4)	57 (8.9)
	채소	107 (27.9)	102 (28.7)	68 (12.8)	68 (12.5)	97 (31.3)	60 (29.4)	136 (26.2)	206 (32.1)
	특작	7 (1.8)	6 (1.7)	10 (1.9)	4 (0.7)	5 (1.6)	5 (2.5)	20 (3.9)	32 (5.0)
	화훼	9 (2.3)	5 (1.4)	5 (0.9)	9 (1.7)	16 (5.2)	10 (4.9)	7 (1.3)	9 (1.4)
	전작	16 (4.2)	9 (2.5)	8 (1.5)	11 (2.0)	15 (4.8)	11 (5.4)	43 (8.3)	32 (5.0)
	축산	76 (19.8)	92 (25.8)	32 (6.0)	24 (4.4)	31 (10.0)	20 (9.8)	43 (8.3)	33 (5.1)
	기타	22 (5.7)	18 (5.1)	3 (0.6)	3 (0.6)	8 (2.6)	5 (2.5)	5 (1.0)	7 (1.1)
	2종 겸업	1 (0.3)	2 (0.6)	326 (61.2)	326 (59.9)	4 (1.3)	3 (1.5)	102 (19.7)	128 (20.0)
	경영주 평균 연령	62.3	65.2	62.1	65.7	68.7	70.3	69.0	74.1
평균 가구원 수	2.6	2.5	2.9	2.7	2.3	2.3	2.3	2.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가치 상승에서 비롯되었다. 2013~2017년 동안 표본 농가의 평균 토지 면적(연중)은 1.20ha에서 1.23ha로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평균 토지 평가액은 2억 1,869만 원에서 2억 7,778만 원으로 27.0% 늘어났다. 같은 기간 농업용 부채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농업용 자산 증가는 신규 투자를 하려고 차입을 하는 행위 등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가 상승에서 기인하였다. 둘째, 2013~2017년 동안 농업용 부채 규모는 -3.3~19.1% 변화하였고, 가계용 부채는 5.6~63.5% 늘어났다. 특히 중위소득 이상을 얻은 유형 1, 2 농가의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 셋째, 원천별 소득 규모와 구성비를 보면 유형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유형 1, 2와 유형 3, 4 농가의 농가소득 격차는 매우 컸고, 주요 소득원(농업 관련 소득, 농업 이외 소득) 비중 역시 현격하게 달랐다. 소득원천별 구성비는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반면 소득 격차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득이 적거나 감소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지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농가 유형별 경영 및 인구학적 특성 관련 기초 통계량을 <표 4>에 요약하였다. 유형별 특성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 1, 2 농가는 표준 영농 규모⁸⁾가 클 뿐만 아니라,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다. 반면 유형 3, 4 농가는 표준 영농 규모가 작고 이를 유지하거나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유형 1, 3은 전업농 및 1종 겸업농 비중 98.5~99.7%였고, 유형 2는 2종 겸업농 비중이 59.9~61.2%였다. 이러한 분포는 <표 1>에서 제시한 농가 유형 특성과 합치한다. 눈에 띄는 점은 유형 4 농가 중 전업농 비중이 80.0~80.3%라는 점이다. 이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에서 전업농을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고령 농가가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오내원, & 김은순, 2001). 셋째, 유형 별로 영농 형태가⁹⁾ 달랐고 <표 4>, 이행경로별로도 차이¹⁰⁾가

8) 표준 영농 규모는 영농형태 별로 농업 자본 관련 유형 자산을 경지 규모에 반영하여 다양한 영농 형태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이다(김미복, 오내원, & 황의식, 2016). 표준 영농 규모는 경지면적 + (농업용 고정자산 / 당해 평균 농지 가격)으로 계산하여 산출한다(최양부, 박성재, & 오내원, 1983; 유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두영, 2019a에서 재인용)

9) 특정 농가 농업총수입 중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영농 형태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농업총수입 중 미곡 수입이 가장 많으면 논벼 농가로 분류된다.

〈표 5〉 위험 종류와 원인

위험 종류	특성, 예시
생산	생육 과정의 불확실성, 기후 조건, 질병 등의 요인에서 기인
시장	가격·경영비·시장 출하 등의 불확실성, 국제 교역 조건,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
제도	향후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때, 지역 내 생산자 조직 등의 변화가 불투명할 때 주로 발생
개인	개인의 건강, 가족 문제, 안전사고 등에서 기인
재무	부채 차입, 유동 자산 확보 어려움 등에서 기인

자료: Komarek, de Pinto, & Smith(2020)을 참고하여 재구성.

났다. 유형 1은 축산 농가, 유형 2는 2종 겸업 농가, 유형 3은 채소 농가, 유형 4는 논벼와 채소 농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각주 10>. 넷째, 농가소득 규모가 작은 농가 유형에서 고령화가 보다 심화되어 있었다. 2017년 기준 경영주 평균 연령은 유형 1, 2 농가가 65.2~65.7세였고, 유형 3, 4 농가는 70.3~74.1세였다. 마지막으로 평균 가구원 수 차이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농가 유형별로 소득 규모 및 원천 비중뿐만 아니라, 경영 형태와 인구학적 특성도 상이하게 때문에 이들이 직면할 위험(risk) 역시 달라질 것이다. 위험은 일반적으로 생산, 시장, 제도, 개인, 재무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표 5>. 특정 위험은 그 자체로 농업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으로(holistically) 다루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 정책은 아직 특정 위험을 주로 다루고 있다(Komarek, de Pinto, & Smith, 2020). 따라서 농가경제, 경영 형태, 인구학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특정 유형 농가가 보다 많이 직면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경영안정 또는 소득·사회 안전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연구결과

앞 절에서 제시한 유형을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도출한 농가경제 이행 경로를 <그림 2>에 요약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 1 농가만 <그림 1>의 ‘재생산 유지

및 성장’ 경로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주로 농업 관련 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였다. 분석 기간 동안 평균 농업 관련 소득과 농업 이외 소득이 각각 1,201만 원, 312만 원 늘어났다. 유형 2, 4 농가는 ‘농업 열화’ 경로에 놓여 있었다. 유형 2 농가는 같은 기간 농업 관련 소득은 평균 86만 원 줄었으나, 농업 이외 소득이 497만 원 증가하였다. 유형 4 농가도 비슷하게 두 종류 소득이 각각 22만 원 감소, 168만 원 증가하였다. 소득 변화 폭은 유형 2농가가 유형 4농가보다 컸다. 유형 3 농가는 ‘재생산 유지 및 성장’ 경로를 따르다가 ‘농업 열화’ 경로로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농업 관련 소득은 6만 원 줄어들었고, 농업 이외 소득은 121만 원 늘어나 2013, 2017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형 3 농가를 제외하면 57.4~69.2%가 2013~2017년 동안 같은 유형에 속해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y)을 나타냈다<표 6>. 최양부(1978)가 주장한 것처럼 특정 경로에서 다른 경로로 이행하고자 할 때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다. 표본 농가 전체 중에는 59.3%가 같은 유형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유형별로 이행경로가 다르고, 유형 내에서도 분화가 나타나는 원인과 그 특징은 무엇일까?

4.1. 유형 1: ‘소득작목 중심으로 전문화 되어 있고 규모화를 꾀하는 농가’

2013년 유형 1에 속했던 농가 중 57.4%가 2017년에도 유형 1에 남았고, ‘재생산 유지 및 성장’ 경로를 따랐다. 나머지 농가는 ‘농업 열화’ 또는 ‘빈곤화’ 추세를 보였다<그림 3>. 유형 1→1 농가¹⁾는 논벼, 축산(특히 대동물), 원예 농가 비중이 높았다<각

10)

영농 형태	1→1	1→2	1→3	1→4	2→1	2→2	2→3	2→4	3→1	3→2	3→3	3→4	4→1	4→2	4→3	4→4
논벼	39	5	9	8	6	35	3	16	12	2	31	38	3	12	11	75
과수	42	12	16	17	4	22	1	8	9	3	15	10	7	8	4	22
채소	62	12	18	16	16	41	6	22	14	3	28	47	10	12	8	121
축산	54	4	5	5	14	15	0	3	13	2	9	11	11	3	6	14
2종 겸업	1	12	3	2	0	244	0	45	0	13	0	4	1	57	0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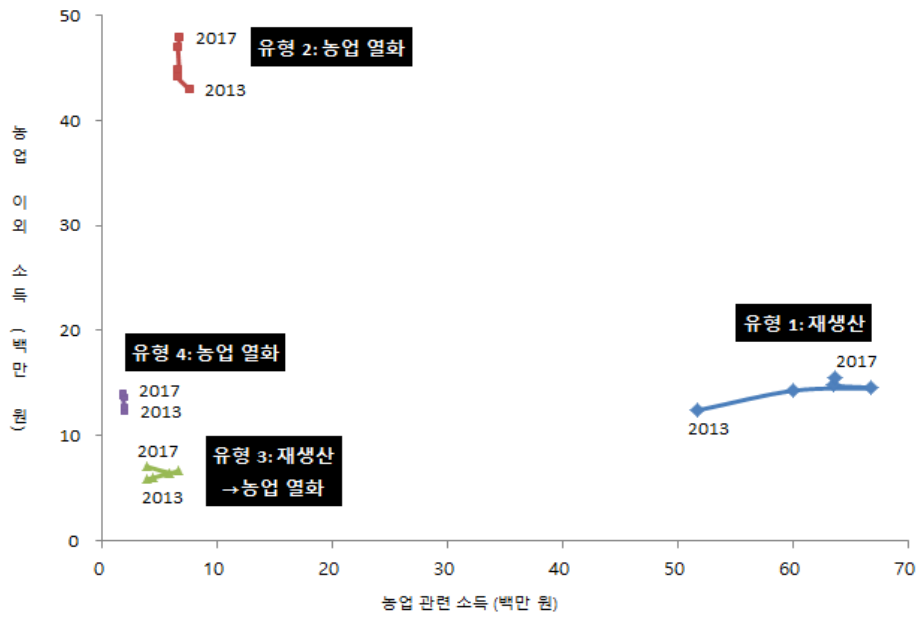
$\chi^2=962.613$, Pr.=0.000. 음영 표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다는 뜻이다.

〈표 6〉 농가 유형별 이행행렬 비중

(단위 : 호, (%))

구분	2017년(2013년 유형별 대비 비중)				소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2013년	유형 1	220(57.4)	50(13.1)	62(16.2)	51(13.1)	383(100.0)
	유형 2	46(8.6)	369(69.2)	12(2.3)	106(19.9)	533(100.0)
	유형 3	54(17.4)	30(9.7)	94(30.3)	132(42.6)	310(100.0)
	유형 4	36(6.9)	95(18.3)	36(6.9)	352(67.8)	519(100.0)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2013~2017년 유형별 농가경제 이행 경로 요약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10>. 이 유형 농가는 분석 기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이 평균 1,792만 원 증가하였다<그림 3>. 또한 농업용 부채는 평균 752만 원 줄어들었고, 기계 및 기구 평가액이 193만 원 늘어났다<표 7>. 농업 관련 활동 수익성이 좋았던 결과로 부채를 줄이면서 자본채를 갱신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유 및 임차 면적을 평균 0.4ha(표준 영농 규모 기준 0.3ha) 늘렸다<표 7>. 요컨대 분석 기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이 늘어났고, 이를 농업 자본채와 토지 확충에 투자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다졌다.

유형 1→2와 유형 1→4 농가는 분석 기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이 각각 평균 3,596만 원, 4,895만 원 줄어들었다<그림 3>. 영농 활동 위주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인 만큼 작황 부진, 가격 위험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유형 농가의 가계 지출은 467만 원 증가, 146만 원 감소하여, 주요

소득원 감소보다 변동 폭이 작았다<표 7>. 그리고 두 유형 농가 모두 소유 및 임차 면적을 줄였고, 농업 이외 소득은 각각 2,794만 원, 13만 원 증가하였다<그림 3, 표 7>. 즉, 두 유형 농가는 농사에서 소득이 격감하였으나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영농 규모와 농업 투자를 줄이면서(기계 및 기구 평가액 감소) 농업 이외 활동에서 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1→4 유형 농가는 농외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자 지출 규모마저 줄이고 가계용 부채를 늘려 대응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유형 1→3 농가는 유형 1→4 농가와 비슷하지만 농업 이외 소득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유형 1→3 농가 역시 유형 1→4 농가와 비슷하게, 경지 규모와 농업 투자를 줄이고(기계 및 기구 평가액, 농업용 부채 감소), 지출 규모도 감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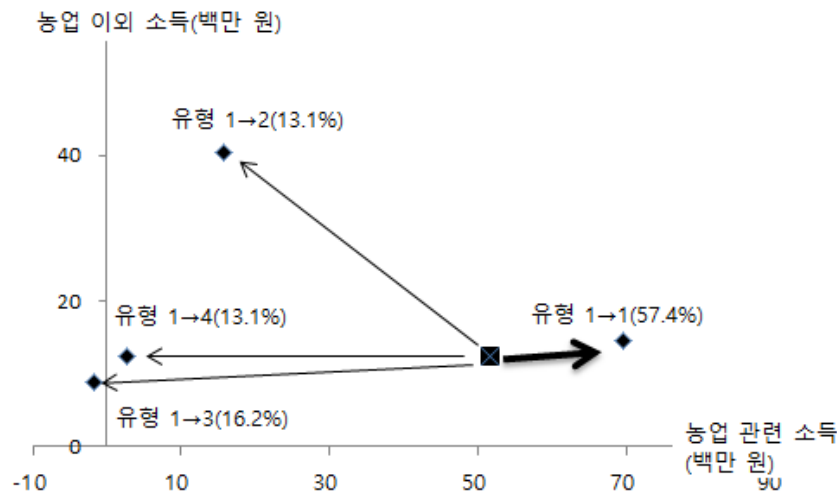
1) 2013년 유형 M에 속했다가 2017년 유형 N(M, N= 1, 2, 3, 4)에 속한 농가를 ‘M→N 농가’라고 표현하였다.

〈표 7〉 유형 1 농가 경영 및 경제 실태 관련 주요 통계량

(단위: ha, 만 원)

구분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		유형 1→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소유 면적(연중)	1.92	1.99	1.57	1.48	1.29	1.14	1.47	1.49
임차 면적(연중)	1.95	2.30	1.82	1.64	2.03	1.75	0.85	0.75
임대 면적(연중)	0.07	0.10	0.02	0.10	0.08	0.16	0.09	0.28
표준 영농 규모	4.45	4.83	3.80	3.44	3.73	3.20	2.65	2.49
기계·기구 평가액(연중)	3,584.0	3,776.9	3,818.9	2,759.3	2,949.9	2,549.6	1,671.6	1,415.6
농업용 부채(연중)	5,513.2	4,761.0	4,338.6	4,258.2	3,501.8	3,241.4	2,082.7	2,427.2
가계 지출	3,990.2	4,359.2	3,779.7	4,246.7	3,330.5	3,035.4	2,771.1	2,625.0
가계용 부채(연중)	721.1	1,236.4	909.7	941.6	702.7	1,115.5	1,487.0	1,922.0
가구원 수	2.6	2.4	2.6	2.5	2.5	2.5	2.2	2.2
경영주 연령	61.2	65.2	60.5	64.3	62.9	66.8	68.5	72.4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가 유형	농가 수	소득 증감				이행 경로
		농업 관련		농업 이외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유형 1→1	220(57.4)		69.6		14.5	재생산 유지 및 성장
유형 1→2	46(13.1)		15.7		40.3	농업 열화
유형 1→3	54(16.2)	51.6	-1.7	12.4	8.9	빈곤화
유형 1→4	36(13.3)		2.7		12.5	농업 열화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유형 1 농가의 이행 경로, 2013~2017년

(단위: (%), 백만 원)

는 한편 가계용 부채를 더 많이 차입하였다<표 7>. 특히 유형 1→3과 유형 1→4 농가는 향후 영농 규모를 회복하거나 늘릴 수 있을지를 예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빈곤화’ 경로로 접어드는 ‘빈곤의 덫’에 빠질 가능성(강혜정, 2015)마저 있다. 유형 1에 속하는 농가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아도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주를 제외한 가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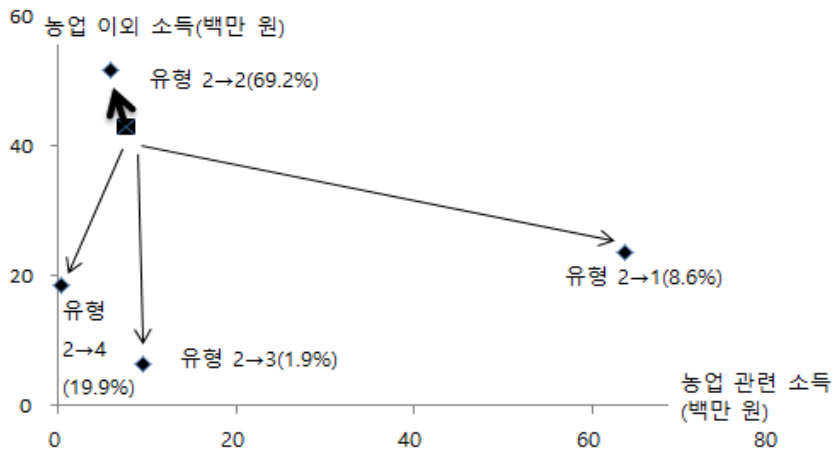
수는 2명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현재 경영주 평균 연령대는 60대 중후반이었고, 유형 1→4 농가는 70대 초반이었다. 이 점으로부터, 특히, 유형 1→3과 유형 1→4 농가는 농외소득 창출에 핵심이 되는 (김정섭, 오내원, & 김경인, 2016; 유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두영, 2019a) 가구 구성원이 부족하여 적절한 소득 원 확보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4.2. 유형 2: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향후 영농 확대 가능성이 낮은 농가'

유형 2→2 농가는 유형 2 농가 중 69.2%를 차지했고, 2중 겸업농 비중이 컸다<각주 10>. 이 유형 농가는 2013~ 2017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은 평균 172만 원 줄었고, 농업 이외 소득은 882만 원 늘어났다<그림 4>. 유형 2→2 농가의 농업 이외 소득

구성을 보면, 분석 기간 동안 겸업 소득은 861만 원에서 1,024만 원으로 늘어났고, 겸업용 부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표 8>. 반면 사업외소득은 2,694만~2,753만 원으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 유형 농가의 농지 면적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농업 부문 자본재 투자도 6.9% 늘어나는 데 그쳤다<표 8>. 즉, 유형 2→2 농가는 농외 활동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대신,



농가 유형	농가 수	소득 증감				이행 경로
		농업 관련		농업 이외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유형 2→1	46(8.6)		63.7		23.8	전업화 · 규모화
유형 2→2	369(69.2)	7.6	5.9	42.9	51.7	농업 열화
유형 2→3	12(2.3)		9.5		6.3	사실상 빈곤화
유형 2→4	106(19.9)		0.3		18.5	빈곤화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유형 2 농가의 이행 경로, 2013~2017년

(단위: (%), 백만 원)

<표 8> 유형 2 농가 경영 및 경제 실태 관련 주요 통계량

(단위: ha, 만 원)

구분	유형 2→1		유형 2→2		유형 2→3		유형 2→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소유 면적(연중)	1.41	1.46	0.91	0.88	0.88	0.94	0.91	0.84
임차 면적(연중)	0.99	1.38	0.46	0.51	0.71	0.45	0.42	0.39
임대 면적(연중)	0.05	0.12	0.12	0.14	0.78	0.61	0.10	0.16
표준 영농 규모	2.92	3.35	1.65	1.62	1.84	1.55	1.58	1.43
기계·기구 평가액(연중)	3,395.7	2,998.1	1,657.8	1,772.4	1,513.5	803.9	1,310.0	1,049.7
농업용 부채(연중)	4,171.5	3,922.7	726.5	885.2	1,135.8	937.5	774.7	451.1
가계 지출	4,267.6	4,306.8	4,126.3	4,291.6	3,497.0	2,543.7	3,242.7	2,490.0
가계용 부채(연중)	853.7	1,039.1	836.2	1,193.7	445.8	391.7	706.1	922.0
겸업용 부채(연중)	92.3	296.0	602.4	450.4	733.3	0.0	149.9	83.0
가구원 수	2.8	2.8	3.0	2.8	2.8	2.3	2.7	2.2
경영주 연령	59.4	63.3	61.2	65.1	65.6	69.2	65.9	70.0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영농 규모는 일정 규모로만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 유형 농가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편이고, 유형 2농가 중 2종 겸업 농 비중이 높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유형 2-2 농가는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향후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세우고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형 2-4 농가는 주력 소득원인 농업 이외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빈곤화’ 경로로 전환되었다<그림 4>. 표준 영농 규모는 2013년 1.58ha에서 2017년 1.43ha로 감소하였고, 농업 자본재 투자도 줄어들었다. 더욱 큰 문제는 같은 기간 농업 이외 소득 중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이 각각 295만 원, 958만 원이나 줄었다는 점이다. 또한 가계 지출도 23.2% 줄어 들었다<표 8>.

종합하면 2-4 유형 농가는 ‘경영주가 소규모로 영농 활동을 하면서, 가구원이 농외 활동을 하여 주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이고 ‘최근 농업 이외 소득이 줄어들면서, 영농 규모를 줄이면서 농외소득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가계 지출을 줄여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유형 2-3 농가도 영농 규모 축소가 조금 덜 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유형 2-4 농가와 유사한 경로를 겪었다. <그림 1, 2>에 따르면 이 유형 농가는 ‘전업화·규모화’ 경로를 따르고 있지만, 영농 규모나 농업 관련/농업 이외 소득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빈곤화’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형 2-1 농가는 표본 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나는 이 유형의 주력 채소 농가가 분석 기간 초기에 경영 부진을 겪었다가 회생을 했을 수 있다.¹²⁾ 다른 가능성은 비교적 젊은 청장년 농가가 농외활동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한 뒤 영농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유형 2-1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대가 낮고, 가구 구성원 수가 많으며, 임차 면적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또한 분석 기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은 늘어난 반면, 농업 이외 소득은 줄어들어 (<표 8>), 자원 투입을 농외 부문에서 농업 부문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형 2 농가 중에는 유일하게 향후 영농 규모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4.3. 유형 3: ‘영농 규모와 가계 지출을 줄여 균형을 맞추는 초고령 농가(I)’

유형 3-3과 유형 3-4 농가는 유형 3 농가 중 72.9%를 차지

했다<그림 5>. 농업 관련 소득과 농업 이외 소득 비중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빈곤화’ 문제를 겪고 있기에 함께 살펴도 무방하다.

두 유형 농가 모두 2013~2017년 동안 영농 규모를 줄였다. 소유지 면적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임차 면적은 줄이는 대신 임대 면적을 늘렸다<표 9>. 농업용 자본재 투자를 줄인 점은 같으나, 농업용 부채 증감 규모는 서로 달랐다. 2017년 현재 경영주 평균 연령이 27.7~75.4세로 매우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영농 규모를 줄였다고 판단된다. 유형 3-4 농가는 같은 기간 농업 이외 소득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적은 편이었다. 가계 지출과 가계용 부채 규모는 2013~2017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가구원 구성도 평균적으로 경영주와 다른 가족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하면 유형 3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유형 농가는 ‘경영주가 초고령에 이르러 영농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를 함께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는’ 이른바 ‘영세 고령농’에 가까운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3-1과 유형 3-2 농가는 임차 위주로 경지 면적을 늘렸다<표 9>. 농업 자본재 투자도 비교적 활발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농업 관련 소득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유형 3-1 농가는 2013~2017년 동안 농업 관련 소득이 평균 4,654만 원이나 늘었으나, 유형 3-2 농가는 513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채소 농가가 많아 품목 작황이나 시장 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현재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유형 농가가 향후 농업 부문 투자를 계속하고 규모를 확대할 여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점에서 두 유형 농가는 <그림 1, 2> 분류상으로는 ‘재생산 유지 및 성장’ 경로에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 ‘전업화·규모화’, ‘농업 열화’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4. 유형 4: ‘영농 규모와 가계 지출을 줄여 균형을 맞추는 초고령 농가(II)’

유형 4-3과 유형 4-4 농가는 유형 4 농가 중 76.7%를 점유했다<그림 6>. 농업 관련/농업 이외 소득 비중이 달라졌지만, 농가소득 규모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2013~2017년 동안 두 유형 농가의 평균 소유·임차·임대 면적과 표준 영농 규모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농업 자본재 투자액을 줄였고, 농업용 부채는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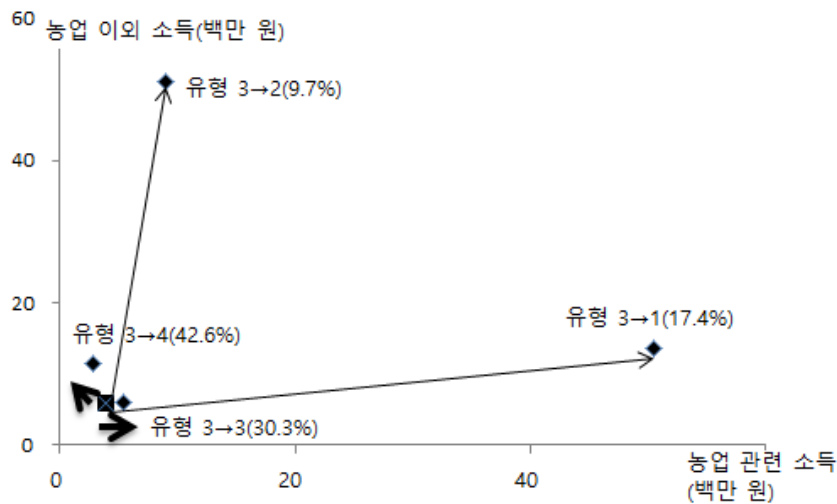
12) 소유 및 임차 면적보다 표준 영농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자본집약적인 방식으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유형 3 농가 경영 및 경제 실태 관련 주요 통계량

(단위: ha, 만 원)

구분	유형 3→1		유형 3→2		유형 3→3		유형 3→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소유 면적(연중)	2.10	2.09	1.01	0.89	0.88	0.84	0.95	0.94
임차 면적(연중)	0.97	1.48	1.25	1.82	0.66	0.60	0.56	0.43
임대 면적(연중)	0.06	0.08	0.09	0.18	0.03	0.07	0.09	0.18
표준 영농 규모	3.50	3.94	2.80	3.17	1.75	1.58	1.67	1.48
기계·기구 평가액(연중)	2,315.6	2,961.3	2,107.8	2,932.4	1,379.0	943.9	964.7	729.4
농업용 부채(연중)	3,910.0	4,913.1	2,681.2	1,954.7	1,147.0	1,058.8	695.0	1,097.6
가계 지출	2,621.2	3,167.6	2,889.7	3,759.9	2,025.7	1,978.2	1,767.9	1,712.9
가계용 부채(연중)	1,643.6	1,306.3	805.2	3,975.6	627.0	514.9	317.0	348.9
가구원 수	2.4	2.5	2.6	2.8	2.1	2.1	2.2	2.1
경영주 연령	63.5	67.0	67.0	67.4	68.7	72.7	71.1	75.4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가 유형	농가 수	소득 증감				이행 경로
		농업 관련		농업 이외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유형 3→1	54(17.4)		50.5		13.6	사실상 전업화·규모화
유형 3→2	30(9.7)	3.9	9.1	5.8	51.0	사실상 농업 열화
유형 3→3	94(30.3)		5.5		5.9	사실상 변화 없음
유형 3→4	132(42.6)		2.8		11.4	사실상 변화 없음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유형 3 농가의 이행 경로, 2013-2017년

(단위: (%), 백만 원)

만~383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표 10>. 결국 영농 규모를 과거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신규 투자나 확대 의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계 지출, 가계용 부채, 가구원 수, 경영주 평균 연령 등도 유형 3→3 및 유형 3→4 농가와 비슷하다<표 9, 10>. 요컨대, <표 1>의 조작적 정의를 따르면 유형 4→3, 유형 4→4 농가는 유형 3→3, 유형 3→4 농가와 구분되지만, 실제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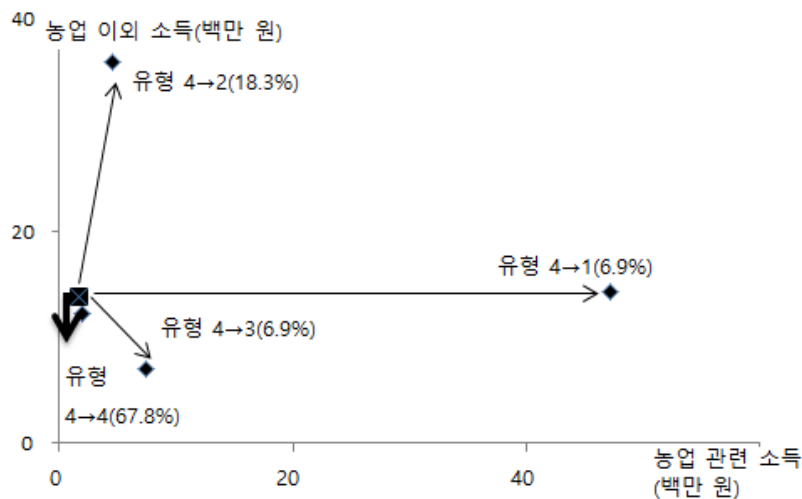
이나 가계 실태 등 측면에서는 비슷했다. 이런 점에서 유형 4→3, 유형 4→4 농가 역시 ‘경영주가 초고령에 이르러 영농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를 함께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는’ 이른바 ‘영세 고령농’에 가까운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4→1 농가는 영농 규모는 전국 평균 수준이고, 논벼와

〈표 10〉 유형 4 농가 경영 및 경제 실태 관련 주요 통계량 (단위: ha, 만 원)

구분	유형 4→1		유형 4→2		유형 4→3		유형 4→4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소유 면적(연중)	1.45	1.52	0.69	0.83	1.04	1.00	0.66	0.62
임차 면적(연중)	1.22	1.36	0.53	0.57	0.63	0.67	0.34	0.30
임대 면적(연중)	0.10	0.04	0.10	0.12	0.13	0.13	0.17	0.23
표준 영농 규모	3.14	3.26	1.44	1.60	1.95	1.89	1.15	1.04
기계·기구 평가액(연중)	3,500.0	2,872.5	1,177.0	1,514.0	1,518.5	1,087.4	732.3	641.2
농업용 부채(연중)	3,665.8	2,303.7	733.0	815.0	1,507.6	1,890.7	335.2	532.0
가계 지출	3,251.6	3,350.9	2,378.5	3,189.0	2,089.7	2,336.4	1,780.4	1,750.9
가계용 부채(연중)	660.4	707.9	589.1	1,130.1	1,050.4	782.1	434.1	315.1
검역용 부채(연중)	0.0	69.4	34.2	346.8	0.0	138.9	38.5	84.0
가구원 수	2.5	2.5	2.7	2.6	2.3	2.3	2.2	2.1
경영주 연령	61.1	65.1	64.7	68.4	65.9	70.1	71.3	75.0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가 유형	농가 수	소득 증감				이행 경로
		농업 관련		농업 이외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유형 4→1	36(6.9)		47.2		14.4	사실상 규모화·전업화
유형 4→2	95(18.3)	2.0	4.6	12.3	35.9	사실상 농업 열화
유형 4→3	36(6.9)		7.5		7.1	사실상 변화 없음
유형 4→4	352(67.8)		1.7		13.8	사실상 변화 없음

자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유형 4 농가의 이행 경로, 2013~2017년 (단위: (%), 백만 원)

채소를 재배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각주 10>. 2013~2017년 동안 영농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농업 자본 재 투자와 농업용 부채 규모도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업 관련 소득이 4,520만 원이나 늘어난 이유는 주로 재배하는 작목 시장 여건이 개선되거나, 경영 부진에 빠졌던 농가가

회복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즉, 농업 관련 소득이 호조를 보였지만 향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고, 영농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들이 영농 활동 중심으로 ‘전업화·규모화’를 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현재 ‘빈곤화’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소득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한국 농가의 소득 구조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이루어져왔다. 소득 수준과 구조를 분석하여 농가의 생산 가능성(영농 지속 여부), 농가의 생계 유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농 승계 등을 통한 적정 규모의 인적·물적 규모 확보에 필요한 기초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많은 논의가 축적된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소득 창출을 하는 근본 목적인 생계와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와 여건 변화 등으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개별 농가가 어떠한 식으로 대응 전략을 취하는가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영농 활동의 작동 원리 등에 따라 농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살림살이 전략(livelihood strategies)을 세울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 온 경영주 연령과 경지 면적 위주의 사전적 기준으로 위와 같은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개별 농가가 처한 여건에 맞추어 택한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의 결과인 소득이 살림살이 전략의 대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농가를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전문화 되어 있고 규모화를 꾀하는 농가’(유형 1), ‘농외소득에 주로 의존하고 향후 영농 확대 가능성이 낮은 농가’(유형 2), ‘영농 규모와 가계 지출을 함께 줄여 균형을 맞추는 농가’(유형 3, 4)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별 농가가 어떠한 이행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지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유형 1 농가는 중 57.4%는 영농 활동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생산 기반에 투자하여 선순환을 도모하였다. 이는 경영 규모를 확대하면 비용 절감 및 소득 증대 효과를 얻거나(축산), 비용 절감 효과는 적지만 수익성을 증가(논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유찬희 외 2019b). 그러나 이 유형 내에서도 42.6%는 농업 열화나 빈곤화를 경험했고, 이 중 28.2%가 채소 농가였다. 채소 농가는 규모화 진전이 느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채소류 소비 정체나 고용 노동력 확보 제약 등 때문에 경영 불안정에 직면하기 때문이다(유찬희 등, 2019b). 바꾸어 말하면 유형 1 농가는 공통적으로 생산 및 시장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고, 고수익·고위험이라는 양날의 검 위에서 서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는 각종 규제 등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제도 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우병준, 김현중, 석준호, & 김명수, 2019). 따라서 경영 안정¹³⁾ 및 투자 활성화 관련 지원을 확충(유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두영, 2019a)하는 한편 새로운 경영 형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 확보나 운영 자금 확보 등을 완화 등을 강화하여 기간(基幹) 농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할 때 제약 요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형 2 농가는 농외소득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 부문 및 전후방 산업 여건이 변해도 충격을 덜 받지만, 반대로 농촌 지역 경제나 노동 시장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사업외소득이기 때문이다. 유형 2→4 농가 비중이 19.9%였다는 점에서도 유형 2 농가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러한 ‘농업 이외’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유형 2 농가는 시장(지역 경제)과 제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농촌 지역 경제 문제를 농업·농촌 정책만으로 오롯이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귀농·귀촌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경제 확산 등 농촌 지역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농림축산식품부, 2020a), 인적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단, “한 가구에 2대나 3대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역할 분담도 어렵다”(구자인, 2020)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농가에 지나친 역량을 요구”(구자인, 2020)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유형 3과 4 농가는 ‘영농 규모와 가계 지출을 함께 줄여 균형을 맞추는’ 특성을 공유했다. 2013~2017년 동안 각각 72.9%, 74.7%가 유형 3, 4 범주에 머물렀다. 2017년 현재 이 유형 농가의 농가소득은 1,141만~1,550만 원에 그쳐, 주요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소득이 적다는 점 자체가 큰 문제였다. 이 유형 농가는 영농 규모가 작고, 규모 확대 또는 투자에도 소극적이었으며 고령화까지 심화되어 있어 영농 활동 중심으로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 그렇다고 농외활동에서 소득을 얻는 것도 녹록치 않다. 기존 중·고령 농업 취업자는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시장에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이정환, 2015),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표 9, 10). 따라서 이 유형 농가는 제도, 개인, 재무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유형 농가를 한국 농업에서 어떠한 위상에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더불어, 보다 다각적인 정책 접근

13) 여기서 경영 안정망은 쌀변동직불제처럼 특정한 목표(상한)를 정하고 실제 경영 성과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영 회생지원 프로그램처럼 최소한의 안전망(하한)을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이 필요하다.

먼저, 농업 경영 안정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분석하고 보완해야 한다. 수입이 적은 농가는 경영 성과가 좋아도 흑자 폭은 작은 반면, 경영이 부진하면 고수입 농가보다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주로 면적 단위로 설계·지원되는 농업 경영 안정 정책 특성 때문에 다수 저수입 농가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유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두영 2019a).

다음으로 유형 3, 4와 같은 농가에게는 농외소득 규모가 경영 성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유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두영 2019a)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충분한 농외소득원을 마련하는 일 역시 개별 농가 수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기는 어렵다. 최근 추진 중인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나 사회적 경제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경지 규모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형 직접직불제의 공동 활동이나 선택형 직접직불제에 참여하여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농림축산식품부, 2020b) 이른바 고령 영세농이 공동 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¹⁴⁾

더불어 인적 위험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소득 창출 활동이 제한된 유형 3, 4 농가에게 더욱 큰 위협일 수 있다. 최근 농업 부문 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적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68호, 2020.2.11. 시행)에서는 보험 관련 내용에 더해 작업 안전 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제16조) 등을 명시하고 있어, 농업인이 직면하는 인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전 보건 거버넌스 구축,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홍보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김미복, 김태후, & 전병균, 2019), 이와 함께 농촌 지역 수요가 늘어나는 요양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이전소득 규모 유지 등 기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유찬희, 2019). 농업·농촌 바깥 영역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이들을 ‘복지와 사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으로 보고 농업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 측면에서 농가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되, 특정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을 사전에 내릴 필요는 없

다. 각 유형 농가는 나름의 작동 원리 하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농가 작동 원리를 바꾸려는 정책 시도는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다만, 농가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소득원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끔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수 농가는 ‘스스로 선택(choice)’하기보다는 여건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necessity)’ 살림살이 전략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선택에 따른 변화는 농가를 이전보다 더 취약한 생계시스템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Ellis, 2000; Gautam, & Andersen, 2016).

이 논문에서 시도한 접근 방법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과제로 남긴다.

첫째, 실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나 지역별 노동 시간 여건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수를 반영하여 원천별 소득원 비중을 바꾸는 농가 의사결정 기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한 농가 표본을 유지하고자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만을 분석하였다. 현재 장기 패널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하였지만, 이러한 경로 이행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또는 구조 변화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03~2007년, 2008~2012년 패널을 동일하게 분석하여 이행 경로를 비교하면 더 많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가 유형 분류에 사용한 기준 자체를 다양하게 변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가장 직관적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농가소득 또는 원천별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유형 분류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관점을 달리하여 도시 근로자 가구 등과의 소득 격차를 기준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넷째, 이행 경로를 따라 같은 유형으로 수렴한, 예를 들어 2013년에 유형 1과 2였지만 2017년 유형 4로 이동한, 농가들이 공유하는 특성과 이들이 겪었을 제약 요건 등을 추가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농가, 예를 들어 경영주 연령 49세 이하가 어떠한 경로를 따라왔는지 등을 별도로 분석하는 작업 또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14)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사업 범위와 내용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기에 이 효과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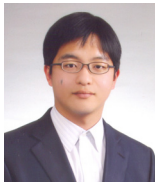
참고 문헌

1. 강혜정. (2013). *농가경제의 위기, 무엇이 원인인가?* Paper presented at the 2013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 발표대회(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2. 강혜정. (2015). 경제적 위기 농가의 특징. *농업경영·정책연구*, 42(2), 217-231.
3. 경영체유형화특별추진단. (2016). *경영체 DB 분석에 기초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정책 기본구상안*.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4. 구자인. (2020). 왜 마을농업인가. *마을*, 5, 15-27.
5. 국승용, 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김문희, & 이수환. (2020). 2020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I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d.), *농업전망 2020(1)* (pp. 3-38).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권오상, & 강혜정. (2006).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부와 농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47(1), 89-113.
7. 김규섭, & 이성근. (2014a). 농가소득의 불평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30(2), 87-102.
8. 김규섭, & 이성근. (2014b). 농가소득의 양극화 추이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28, 25-45.
9. 김미복, 김태후, & 전병균. (2019).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농업인안전보험 발전방안 연구*.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김미복, & 박성재. (2014).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95(2014. 10. 10.).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김미복, 오내원, & 황의식. (2016). *농가 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132(2016. 8. 25.).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김병택. (2002). *한국의 농업정책*. 서울: 한울 아카데미.
13. 김성용. (2004). 농가소득 불균등의 변화 추이와 소득원천별 분해. *농업경제연구*, 45(4), 97-115.
14. 김성용, & 이계임. (2002). *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김성용, & 이계임. (2003). 한국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37(3), 73-82.
16. 김수석, 김태곤, & 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 유형 구분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 김정섭, 오내원, & 김경인. (2016). *농가의 다면적 경제·사회활동 실태와 과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김정호. (2012). *가족농 연구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김태이, 임정빈, & 안정환. (2012).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53(1), 41-46.
20. 농림축산식품부. (2020a).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 농촌*.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21. 농림축산식품부. 2020b.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Retrieved March 2, 2020, from <http://mafra.go.kr>
22. 박재홍. (2016). 농가경제 장기변화(1985~ 2015년) 추이. *NH농협 조사월보*, 60, 42-56.
23. 박종섭, & 이병기. (2000). 충북지역 농가소득 분배의 시계열 추이와 그 변화요인 분석. *지역정책연구*, 11(2), 307-326.
24. 박준기, 황의식, & 문한필. (2005).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 서종혁, & 김은경. (2007). *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수원: 경기연구원.
26. 서종혁, 박동규, 위용석, 강봉순, 황의식, 안동환, et al. (1991).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의 평가와 장단기 발전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7. 안동환. (2004). 도시 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비교 분석: 엔트로피지수의 그룹별·소득원별 분해. *농업경제연구*, 45(1), 21-46.
28. 오내원, & 김은순. (2001). 농외소득정책의 발전방향: 농외소득의 실태와 정책방향. *농촌경제*, 24(2), 103-118.
29. 오내원, 박준기, 정원호, 권오상, & 강혜정. (2013). *농가소득의 중장기 실태 분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 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 한보현. (2017). *농가 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157(2017. 11. 30.).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1. 우병준, 김현중, 석준호, & 김명수. (2019).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2/2 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유찬희. (2019). *농가유형별 소득 구조와 증대 방향*. Paper presented at the 농협중앙회 전문가 토론회(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농협중앙회. 서울.
33. 유찬희, 김미복, 박준기, & 이두영. (2019a). *2018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총수입과 농가경제영여 분석 중심*. 현안분석, 69(2019. 12. 20.).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4. 유찬희, 김정섭, 김태훈, 최용호, 오내원, 박지연, et al.

- (2019b).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 과제(1/2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5. 유찬희, 박준기, 김종인, & 박지연. (2016).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1/2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6. 유찬희, 서홍석, & 김태후. (2019).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179(2019. 4. 10.).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7. 윤지원, & 권오상. (2015). 영농형태별(품목유형별) 농업소득 변화 요인 분석. *농촌경제*, 39(4), 29-49.
 38. 이두영, 박준기, 김미복, & 박지연. (2019). 농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분해. *농촌경제*, 42(1), 1-26.
 39. 이상원, 추성민, 안동환, 김혁주, & 김관수. (2018). 농업소득 변동성을 고려한 농외소득활동 참여 및 농외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59(1), 1-26.
 40. 이영기. (2006). 농업구조정책의 주요과제. In 정영일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Ed.), *21세기 농업·농촌의 재편전략* (pp. 258-277). 서울: 박영출판사.
 41. 이정환. (2015). *한국농업 70년(1): 노동시장의 충격과 대응-노령화에서 탈노령화로*. 시선집중 GSnJ, 202(2015. 8. 10.). 서울: GSnJ Institute.
 42. 이정환, 설광연, 이명현, 김명환, 김한호, 서진교, et al. (2012).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합리화 방향*. 서울: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GSnJ 인스티튜트.
 43. 임소영. (2017). *농가 소득의 연령별·세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Paper presented at the 한국농업경제학회 2017 하계학술대회(포스트 무역자유화 시대 한국농업의 방향과 전망),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 신안.
 44.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구조적 변화 분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5. 정대회, 임준혁, & 한두봉. (2018). 농가경제 재무구조의 변화분석. *농업경제연구*, 59(2), 17-40.
 46. 정선화, & 강혜정. (2015). 한국 농가의 소득원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56(1), 119-135.
 47. 정진화, & 조현정. (2012). 농가소득의 양극화: 경영주 연령 및 소득원별 비교. *농업경영·정책연구*, 39(3), 420-450.
 48. 조승연. (2000). *한국농촌사회변동과 농업생산구조*. 서울: 서경문화사.
 49. 최양부. (1978). 농가소득 증대방향에 관한 이론적 검토-특히 영세소농의 농외소득증대 문제와 관련하여. *농촌경제*, 1(2), 109-120.
 50. 최양부, 박성재, & 오내원.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 분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1.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업·농촌 70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3. 한석호, 김수석, 채광석, 유찬희, 남경수, & 정호연. 201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DB 분석 및 활용 연구*.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4. 허등용. (2018). 샵리 값을 이용한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소득원천별 기여도 분석. *농촌경제*, 41(4), 1-27.
 55. Ahearn, M. C., & El-Osta, H. S. (1993). *The role of off-farm employment: Permanent or transitional state*.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s, Baltimore, MD.
 56. Bowler, I., Clark, G., Crockett, A, Ilbery, B., & Shaw, A. (1996).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farm enterprises: A study of family labour farms in the Northern Pennines of England. *Journal of Rural Studies*, 12(3), 285-295. doi:10.1016/0743-0167(96)00015-0
 57. Cervantes-Godoy, D. (2015). *Strategies for addressing smallholder agriculture and facilitat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Paris: OECD Publishing.
 58. Ellis, F. (2000). The determinants of rural livelihood diversifi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1(2), 289-302. doi:10.1111/j.1477-9552.2000.tb01229.x
 59. Fuller, A. M. (1990). From part-time farming to pluriactivity: A decade of change in rural Europe. *Journal of Rural Studies*, 6(4), 361-373. doi:10.1016/0743-0167(90)90049-E
 60. Gautam, Y., & Andersen, P. (2016). Rural livelihood diversification and household well-being: Insights from Humla, Nepal. *Journal of Rural Studies*, 44, 239-249.
 61. Kinsella, J., Wilson, S., de Jong, F., & Renting, H. (2000). Pluriactivity as a livelihood strategy in Irish farm households and its role in rural development. *Sociologia Ruralis*, 40(4), 481-496. doi:10.1111/1467-9523.00162
 62. Komarek, A. M., de Pinto, A., & Smith, V. H. (2020). A review of types of risks in agriculture: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Agricultural System*, 178, 1-9.
 63. Mishra, A. K., El-Osta, H. S., Morehart, M. J., Johnson, J. D., & Hopkins, J. W. (2002). *Income, wealth, and the economic well-being of farm households*. AER No. 812, Washington DC: ERS USDA.

64. Ploeg, J. D., van der, & Ye, J. (2010). Multiple job holding in rural villages and the Chinese road to development.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7(3), 513-530. doi:10.1080/03066150.2010.494373
65. Weltin, M., Zasada, I., Farnke, C., Piorr, A., Raggi, M., & Viaggi, D. (2017). Analysing behavioral differences of farm households: An example of income diversification based on European Farm Survey Data. *Land Use Policy*, 62, 172-184. doi:10.1016/j.landusepol.2016.11.041

Received 22 February 2020; Revised 15 March 2020; Accepted 20 March 2020



Dr. Chan-Hee Rhew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outh Korea. His main research interest fields include farm economy, agricultural structure, and multifunctional agriculture.
Address: (58321) KREI, 601 Bitgaram-ro, Naju-si, Jeollanam-do, South Korea.
E-mail: chrhew@krei.re.kr
phone: 82-61-820-2022



Dr. Yun-Jin Kim is a Researcher a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 is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and evaluation.
Address: (58321) KREI, 601 Bitgaram-ro, Naju-si, Jeollanam-do, South Korea.
E-mail: mindy33@krei.re.kr
phone: 82-61-820-2026



Dr. Chang-ho Kim is a Researcher a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policy.
Address: (58321) KREI, 601 Bitgaram-ro, Naju-si, Jeollanam-do, South Korea.
E-mail: chkim@krei.re.kr
phone: 82-61-820-2026